"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27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3월 22일 수요일(음력 2월 1일)

제주, 유수율 꼴찌·누수율 전국 1위 오명 벗을까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연간 600억원 달해
1인당 하루 물 사용량도 334ℓ로 전국 세 번째
"변기 물 사용 줄이기 등 절수 노력 절실 시점"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유엔은 1992년 12월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했다.

유엔이 정한 올해 물의 날 주제는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이다. 물부족 위기 극복을 위해 지하수 보전 등을 위한 각종 정책에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주자치도 역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변화의 가속화'에 동참해야 하지만 물 관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1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유수율은 51.8%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전국 평균 유수율은 85.9%이다. 특·광역시 유수율은 93.2%이다. 유수율은 총급수량에 대한 유수수량의 백분율로, 정수장에서 생산해 공급한 송수량중에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또 제주도 누수율은 43.1%로 전국 1위이다. 전국평균 누수율 10.2%에 비해 무려 네배나 높다. 제주에 이어 경북 23.3%, 전북 21.6%,강원도 21%, 경남 17%, 충남 16.3%, 충북 8.7%, 경기도 6.6%의 누수율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연간 누수량은 7076만 9000t이다.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6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민 1일 1인당 물사용은 334ℓ로 충청북도 432.3ℓ, 강원도 339.2ℓ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상북도 327ℓ, 인천광역시 326ℓ이다.

제주지역 농업용수 유수율도 5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농업용 지하수 관정 224개소의 공급량과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62%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7년 상수도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목표치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유수율 45.7%에서 2021년 51.8%로 끌어 올리는데 수천억원을 투자했으나 지난 5년 동안 끌어 올린 유수율은 6.1%p에 그쳤다. 2027년 85%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6%p 이상 끌어 올려야만 가능하다.

서부지역 지하수 관정 해수침투 문제는 담수 인공함량으로 풀어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인공함양 실현까지는 막대한 기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한 지하수 전문가는 "지하수 오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염예방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하수 오염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도민들이 절수를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시행해 나가야 한다"면 "변기 물 사용량 줄이기, 공공기관 절수 시스템 의무 설치 등 방안을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전'이 21일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개막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전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미현기자

서울에 옮겨놓은 33개 제주마을 속으로

어제 서울메트로미술관서 '백리백경전' 개막
양기훈 작가 작품으로 66곳 풍경 오롯이 전해

빛과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제주마을을 화폭에 담은 양기훈 작가의 '제주마을 백리백경전'이 21일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개막식에는 양기훈 작가와 정원태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성동원 ICC 서울소장, 이윤형 한라일보 편집국장, 강동호 서울제주도민회 상근부회장, 이지영 제주관광협회 서울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출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막식 직후 전시회를 찾아 관람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가 주관하고 한라일보가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제주알리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3개 제주마을 속 66곳의 풍경이 선보이고 있다.

정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전시회 작품 속 제주의 마을에는 제주인의 삶과 애환이 그 이면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들에게 제주를 좀 더 알리는데 이번 전시회가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기훈 작가는 "제주를 얘기할 때 '영주십경'을 많이 언급하는데, 저는 제주를 열 개로 뭉뚱그리지 않고 백리백경의 백 개가 의미하는 모든 마을, 소박한 제주마을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평생 농사짓고 바다에서 일하면서 갤러리라는 곳에는 한 번 가보지 못한 우리 아버지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누구네 집 옆길 아니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했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서울메트로미술관은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지하 1층에 위치해있다. 서울=부미현기자

만장굴 24일 재개방… 모니터링 등 안전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6일 낙석 발생으로 임시 폐쇄한 만장굴을 오는 24일 다시 개방한다.

도는 만장굴 낙석 발생 이후 지금까지 24시간 모니터링 결과 낙석이 발생하지 않았고, 문화재청 및 동굴전문가 의견에 따라 잔석 제거 조치 등을 완료한 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안전진단 전문가 자문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자문에 따라 결빙으로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구간에 부직포를 깔고 1일 4차례 육안 확인 및 구간별 24시간 영상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태윤기자

읍·면·동에 워케이션 빌리지…3면 / '글로컬대학 30' 예의주시… 5면

분산에너지 특구 '청신호'
분산에너지법 산자위 소위 통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주도와 같은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실험을 거쳐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을단위의 분산에너지 체제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에너지분권의 초석이 마련되고 에너지자립 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초 법안에 담겼던 과잉발전으로 인한 출력제어 시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논의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해 의결된 법안에서는 빠졌다.

한편 제주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민국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청해왔다.

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간호단독법
+ 의료인면허박탈법
= 민생파탄법

간호단독법을 왜 반대하나요?
① 간호단독법은 다른 보건의료인들을 희생시켜 간호사만 이득을 보는 법안입니다.
②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불법의료가 판치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③ 간호단독법은 의료기관에 간호사 구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킵니다.
④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직역마다 너도나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왜 반대하나요?
① 의료인들은 중대 범죄자의 면허박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 현재 발의된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교통사고, 집시법 위반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소지가 높습니다.
③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분쟁만으로도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필수의료진료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의료스템을 붕괴시킵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단독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의료연대
제주도간호조무사회 / 제주도방사선사회 / 제주병원회 / 제주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 제주응급구조사회 / 제주임상병리사회 / 제주도의사회 / 제주도치과의사회
제주도노인복지협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제주재가노인복지협회 / 제주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